“문화재→유산으로…비지정 유산 보존 박차”

최응천 문화재청장, 7월 27일 첫 기자간담회

국가유산법 제정, 관리 체재 변화
사각지대 비지정 유산 보존 추진
지자체 문화재 전문인력 배치 계획
“홍천사 동종 등 환지본처 사안은 원칙적 동의…보존·활용 우선돼야”



최응천 문화재청장(가운데)이 7월 27일 열린 취임 첫 기자간담회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문화재청이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바꾸고 보존 사각지대로 여겨졌던 비지정 유·무형 문화유산에 대한 관리에 나선다.

최응천 문화재청장은 7월 27일 한국의 집에서 취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 문화재 정책방향과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최 청장이 밝힌 정부의 문화재 정책 방향은 △국가유산 체재 전면 전환 △문화유산의 온전한 보존과 활용 △문화재와 국민이 상생하는 정책 △세계 속 우리 유산 가치 확산이다.

먼저, 최 청장은 “정책 환경 변화가 빠르게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60년 동안 유지돼 온 우리의 문화유산 보존·관리체계의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며 1962년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의 전면 개편을 예고했다.

이를 위해 ‘국가유산기본법’과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의 특성을 반영한 개별법을 제정하고 문화재 정책 기반 확장을 추진한다. ‘국가유산기본법’에는 최근 마련된 ‘문화재 명칭 및 분류체계’ 개편안도 반영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지난 4월 문화재위원회와 무형문화재위원회가 발표한 결의문을 바탕으로 1962년 제정 이후 60년 동안 이어왔던 ‘문화재보호법’ 대신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최 청장은 사라져가는 비지정 역사문화자원의 보호와 활용을 위해 비지정문화재와 미래 유산을 아우르는 포괄적 보호체계 구축 계획을 내놨다. 2024년까지 약 6만여 건에 달하는 전국의 비지정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전수조사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목록유산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특히 소멸 위기에 놓여 있는 비지정 무형유산 발굴을 위해 올해부터 5년간 지자체를 통한 발굴 공모를 진행한다. 선정된 무형유산은 3년간 지원이 이뤄지게 된다.

지자체에 문화재 전문인력을 의무배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최 청장은 “현재 전국에 지정·등록된 문화재는 약 1만 4600여 건이다. 이 중 77% 이상을 문화재 현장 최일선에 있는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16개소에만 문화재 전담부서가 설치돼 있다”고 지적하며 “문화재청은 지역 중심, 현장 중심의 보존 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자체의 문화재 전문인력 의무배치를 입법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적 추세에 맞는 세계유산 관리체계도 확립한다. 이는 최근 김포 장릉 아파트 갈등에 따른 후속 대책으로 보여진다. 최 청장은 “유네스코는 세계유산 주변의 개발행위가 세계유산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평가하는 ‘유산영향평가’ 제도 도입을 유네스코 회원국에 권고하고 있으나 아직 국내법상에는 동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면서 “문화재청은 세계유산법을 개정해 ‘세계유산영향평가’ 제도를 법제화하여 유네스코 기준에 부합하는 세계유산 보호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 문화재청은 흥천사 동종, 보원사지 고려철불 등 지역 사찰과 지자체 등이 요구하는 환지본처 사안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윤순호 문화재청 보존국장은 “문화재가 본래 자리에 있는 것이 문화재의 역사적 특성 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며 “다만 문화재의 보존 상태 등의 여러 여건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해당 단체가 보존 관리가 가능한지, 어떻게 활용한 것인지를 살펴봐야 한다. 이를 살피며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양주 회암사지’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

세계유산센터 7월 26일 게재
1년 후 세계유산에 등재 가능
“선종 문화 번영·확산 증거”


양주 회암사지 전경.

양주 회암사지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한 발짝 다가섰다.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지난 7월 20일자로 ‘양주 회암사지 유적(Archaeological Remains at the Hoeamsa Temple Site in Yangju City)’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Tentative List)에 등재됐으며, 세계유산센터 공식 홈페이지에 7월 26일 최종 게재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한국은 총 13건의 세계유산 잠정목록을 보유하게 됐다.

세계유산 잠정목록은 세계유산으로서 가치가 있는 유산에 대한 충분한 연구와 자료 축적을 통해 향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준비하는 제도이다.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서는 반드시 잠정목록에 등재되어야 하며, 잠정목록에 등재된 후 최소 1년이 지나야만 세계유산 등재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경기도 양주시에 위치한 ‘양주 회암사지 유적’은 70여 동의 건물지가 확인된 중심사역과, 부도·석등·비석 등 고승들의 기념물로 구성돼 있다.

문화재청은 유네스코에 제출한 잠정목록 신청서를 통해 양주 회암사지가 14세기 동아시아에 만개했던 불교 선종문화의 번영과 확산을 증명하는 탁월한 물적 증거이자, 불교 선종의 수행 전통과 사원의 공간구성 체계를 구체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점을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로 제시했다.

문화재청은 “경기도, 양주시와 함께 적극적으로 협력해 ‘양주 회암사지’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조계종 교구본사協, ‘선암사 판결’ 규탄

7월26일 회의서 성명 채택
“사법부가 불교 혼란 초래”

순천 선암사를 두고 지속되는 조계종·태고종 간 소유권 분쟁에서 최근 법원이 태고종 승소 판결을 내린 데 대해, 조계종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교구본사주지협의회는 7월 26일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제75차 회의를 열고 사법부를 규탄하는 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는 지난 7월 7일 태고종 선암사가 조계종 선암사를 상대로 제기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말소’ 소송에서 광주고등법원이 조계종 선암사의 실체를 부정하는 판결을 내린데 따른 것이다.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은 성명에서 “광주고등법원의 이번 판결은 일제 강점기 시절 일본불교를 배척하면서 민족의 역사성과 정통성을 수호하고 한국불교의 전통을 지켜온 조계종의 실체를 부정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스님들은 “사법부는 조계종 스님들이 거주하지 않기에 조계종 선암사의 실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황당한 논거로 선암사 사건을 들여다 보았다”며 “그러나 사법부의 이러한 판단은 근현대사 속에서 한국불교의 자주적 교단 건립운동과 왜색불교 척결운동, 그리고 그 과정에서 탄생한 유일무이하게 국가로부터 합법적으로 인정받은 조계종의 실체를 외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2011년 조계종과 태고종이 재산관리인 순천시장을 해임하고 선암사의 재산권보호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는 합의는 정부와 태고종 선암사도 조계종 선암사의 실체를 인정했기에 가능했던 것”이라며 “정부와 지자체, 태고종 선암사도 조계종 선암사의 실체를 인정했지만 유일하게 대한민국 사법부만 조계종 선암사의 실체를 부정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주지 스님들은 “사법부가 내세운 황당한 실체 논거는 곧 조계종이 소유권 주장을 위해 실효적 지배에 나서라는 것으로, 결국 대한민국 사법부가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한국불교계를 갈등과 물리적 충돌로 내몰고 있는 것”이라며 사법부에 객관적 사실과 역사적 진실을 근거로 이성적 판단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한편 전국교구본사주지협의회는 이날 여순사건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하는 성명서도 채택했다.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의료위기’ 스리랑카에 1억 5천여만원 의약품 지원

마하위하라·(사)인간의대지
7월 22일 대사관서 전달식해



국가부도 사태 이후 의료시스템 붕괴 위기에 직면한 스리랑카를 위해, 한국 불교계가 인도적 지원을 위한 필수의약품 지원에 나섰다. 특히 이번 지원은 한국 내 스리랑카사찰인 마하위하라 사원을 중심으로 공익단체 (사)인간의대지, 주한스리랑카대사관, 한국 불자들의 자비온정이 함께한 결실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마라위하라 사원(주지 담마끼띠)과 (사)인간의대지(이사장 곽병태)는 7월 22일 주한스리랑카대사관에서 ‘필수의약품 전달식’을 진행했다.〈사진〉 의약품은 총 1억5000여만 원 상당 규모로, 스리랑카 국적기를 통해 7월 20일 1차, 27일 최종 발송이 완료됐다.

이번 의약품 지원은 마하위하라가 지난 6월 진행한 ‘스리랑카 국민을 위한 필수의약품 지원 캠페인’에 따른 결실이다. 캠페인은 국가부도 이후 의약품 부재로 의료공백이 심각한 스리랑카 본국 국민들을 위한 모금운동으로 진행됐으며, 불교언론 보도를 통해 십시일반 온정이 모였다. 특히 이 과정에서 향운사 주지 지상 스님이 (사)인간의대지와의 가교역할을 하면서 대규모 의약품 후원의 결실로 이어졌다.

이번에 전달된 의약품은 노령·기저질환자의 생명연장, 갑작스런 사고로 치료가 필요한 환자 등 긴급처치를 위해 스리랑카 보건국이 요청한 필수품목으로 구성됐다. 긴급 지원인 만큼 주한스리랑카대사관 측은 본국 복지부와 국적항공회사 등 관계부처와의 행정적 절차를 최소화하고 의약품들이 즉각 본국에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사비트리 주한스리랑카 대사는 “담마끼띠 스님과 인간의대지, 한국 불자와 국민 모두의 도움에 스리랑카 정부를 대신해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부처님께서는 건강이 가장 행복한 선물이라고 하셨다. 이번 기부가 본국 국민들에게 큰 도움의 손길을 전하는 것은 물론, 한국과 스리랑카 양국 간 돈독한 교류·협력 증진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사)인간의대지 심복자 상임이사는 “이번에 전달된 필수의약품 중에는 유통기한이 짧고 긴급히 전달돼야 하는 품목들도 포함돼 우려했지만, 모두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기적적일 만큼 빠르게 발송절차가 이뤄졌다”며 “현지에 필요한 분들께 잘 전달돼 도움이 됐음이 확인되면 2차, 3차 추가지원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담마끼띠 스님은 “스리랑카 국민들의 생명을 자비로 품기 위해 한국 불자님들과 불교언론, 향운사 스님과 인간의대지, 대사관, 항공사 등 모두가 적극적으로 마음을 모으고 나서주신 덕분에 가능했던 일”이라며 “본국에 전달된 의약품들이 고통받는 국민들의 생명을 살리는 씨앗이 되길 바란다”고 감사를 전했다.

한편 마하위하라 사원이 진행한 ‘스리랑카 국민들을 위한 필수의약품 지원’ 캠페인을 통해 모연된 금액은 7월 21일 기준 800여만 원 상당이다. 인간의대지가 의약품을 후원하고 발송은 스리랑카 국적기를 통하면서, 모연금은 국내 화물이송 비용과 혼란지역의 쌀 지원 비용으로 사용될 전망이다.

송지희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인증 승려연수과정

승려연수과정 수강생 모집
현대인을 위한 생활수행과 포교
코로나 이후 법회 운영 어떻게 할 것인가?

일 정 2022년 8월 24일(수) ~ 26일(금), 2박 3일
장 소 경주 황룡원
(경북 경주시 엑스포로 40 (지번) 신평동 150-8)
문 의 031-470-3196, 3200 (월요일 휴무)
정 원 50명(선착순)
교육비 20만원(국민은행, 292-01-0033-316) (재)한마음선원과학원

법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컨텐츠
▶ 생활 속 참선 수행의 원리와 교육방법
▶ 변화하는 시대의 사찰 운영 사례
▶ 온라인법회 운영과 컨텐츠 제작 및 사례
▶ 마음과 과학

	1일차 (8월 24일, 수)	2일차 (8월 25일, 목)	3일차 (8월 26일, 금)
09:00~12:00		수행과 포교의 연계성 ‘원리와 사례’	현대인을 위한 포교
14:00~17:00	현대적 생활 수행과 포교 방안	생활 속의 마음공부 ‘실천중심 방법론’	
18:30~20:30	불교 속의 과학 과학 속의 불교	뉴노멀 시대 온라인 법회 활용 방안	

재단법인 한마음선원
한마음과학원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모바일 신청도 가능합니다.